



언론학 교육 60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Sixty-years of media education: Where we are going, where we need to go.

Myungkoo KANG*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form of media education in the context of digital disruption. Looking back at the sixty-year historical trajectory of media and journalism edu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illuminate the scope of and the ways in which the media educator re-formulates the changing natur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oming age of digital disruption. Three proposals for media education reform were presented. First, this study proposes the integration of theory and production education into the education of practical knowledge. Such an integrated approach is validly applicable even within the hierarchical arrangement of South Korean universities along SAT scores. Second, the study suggests 1) the need to reestablish the philosophical epistemolog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chines and humans in the post-human era, and 2) the introduction of an educational framework, called 'thematic module of the program unit', so as to encourage cooperation across various disciplines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 education reform. Finally, the study proposes 'work-based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cope with the intensifying precarious nature of the digital media industry's labor market.

Keywords: media education, digital disruption,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al knowledge

* kang.myungkoo@gmail.com

1. 들어가는 말

언론학 교육 미래위원회는 2005년 “우리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언론학을 가르치는 학과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는 자기 반성을 위한 성찰을 하고자 했다. 20년 정도가 지난 2019년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바꿔야만 하게 되었다.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가르치는 자 중심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에서 이제 가르치고(teaching) 배우는 과정(learning)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신과 파괴(transformation and disruption)로 비롯된 4차산업혁명(industry 4.0)은 교육에 있어서 핵심주체인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역할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새로운 도전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산업 4.0에 대응하는 교육4.0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 4.0의 맥락에서 언론학 교육을 새롭게 사고해야 하게 된 것이다.

언론학 교육 60년이 되었는데,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은 구성원들의 성숙과 지혜 보다, 기술이 이끄는 파괴적 혁신에 적응을 강제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가져다 주는 제도운영의 경험과 축적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파괴적 혁신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지난 시간의 축적 위에 다가오는 파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나아가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언론학 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성찰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쟁 직후 5명의 창립회원이 모여서 결성한 신문학회(언론학회의 전신)는 1천여 명이 넘는 커다란 학회로 자라났다. 초기 신문학회의 당면과제는 기자 양성에 있었다.¹⁾ 7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돌아온 1.5세대 교수²⁾들이 신문방송학과에 자리 잡으면서 언론학을 사회과학의 한 분과학문 분야로 간주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언론학을 설정하는 인식은 전문기자와 피디를 양성한다는 전통적인 교육 목표와 부딪히게 되었고, 이런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1974년 사회과학대학 학과로서 신문학과

1) 무엇보다 과복산, 최준, 임근수 등 신문학회 창립멤버들이 신문학원을 설립했고, 신문기자 양성이 가장 큰 목표였다 (정진석, 1995; 김영희, 2012). 방송의 경우 당시 라디오 보급이 일천했기 때문에 방송인을 키우는 것은 전연 이들의 과제가 아니었다. 당시 텔레비전 연출은 주로 연극인 출신들이 간략한 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었다.

2) 50년대, 60년대 신문학회를 구성했던 교수들을 1세대로 한다면, 그들에게 배운 세대들은 80년대 이후부터 학계로 진출했다. 언론학 1.5세대는 1세대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해외유학을 한 뒤 70년대 중반부터 학계에 자리잡은 학자들을 가리킨다.

와 현업기자들을 재교육하는 신문대학원이라는 이중적 제도로 재출범한 사례 역시 이런 두 가지 흐름을 타협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전국적으로 새로 생겨난 신문방송학과에는 이 두 흐름을 이어받아 사회과학적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교수로 자리 잡고, 현업 관련 교육은 언론 현업 출신 언론인들이 담당하는 이중구조가 정착되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대학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대학의 구조뿐만 아니라, 교수의 충원과 평가의 기본 틀을 바꾸어버렸다. 자연과학과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논문 중심의 평가체계와 외국 저널을 '신성시'하는 평가운영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평가체계 자체의 비판적 논의는 이 글의 논지를 넘어서었다. 다만 이런 평가체계가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비 수주와 연구업적(그것도 논문 편수)에 매몰되게 했고, 학부 교육은 사실상 관심사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런데도 4차산업혁명이 창의적이고 협력적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담론이 넘쳐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 소재한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 많은 지역대학의 언론 관련 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산업현장을 다녀야 하고, 동시에 학술적 업적도 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학생등록 감소로 인해 교수가 학생충원을 위한 전략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파도, 그로 인한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에 경쟁력 강화정책이 왜곡시키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장 등, 언론학 교육의 당면과제는 대단히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정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글은 실타래의 꼬임을 한꺼번에 자르고, 처음부터 다시 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파괴적 혁신에 맞서는 또 다른 파괴적 혁신의 전략으로.

이런 문제 인식에서 다음 절에서는 디지털 민주주의 4.0과 민주적 공론장의 위기를 살펴 보겠다. 3절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전개되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제영역이 너무 넓어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안에서 콘텐츠기획과 제작을 담당해 오던 기자와 피디 등 전문직의 역할 변화에 주목해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 두 가지 문제영역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서 4장에서 한국 언론학 교육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 디지털 민주주의 4.0과 민주적 공론장의 위기

민주주의는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 위에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율과 자유를 중시하는 ‘얇은 민주주의’(thin democracy)와 시민의 참여와 직접 지배를 지향하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에 따라(Barber, 1998) 공론장은 다른 형태를 띠겠지만, 두 가지 모두 축복임과 동시에 위험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진단과 예측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아랍의 민주주의 혁명, 한국의 촛불혁명, 현재 진행 중인 홍콩의 시민저항 등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의 연결을 통해 가능했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누구나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말을 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연결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열려있다. 반면 국가에 의한 정보감시체계, 클릭 중심의 플랫폼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대중주의(populism)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양산하게 하면서 민주적 공론장을 위협하고 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신뢰 부재의 공론장이 저널리즘 전체를 흔들고 있다(김영주·정재민·강석, 2016; 이재경, 2013; 정은령, 2018; Neorone, 2012; Schudson, 2008).

원하던 원하지 않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생활세계와 공적세계에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 디지털 민주주의 4.0이 어떻게 민주주의 공론장의 위기를 배태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글의 전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사회생산력 발전에 중추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기술중심 담론이 지배적이다. 4차산업혁명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주장과 걱정들 역시 이런 믿음을 숨기지 않는다. 필자는 이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철학적·도덕적·정치적 관점에서도 테크놀로지는 사람에 의해 통치되고 또 그러해야한다고 믿는다. 국가가 그것을 감시체계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하는 것이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사람을 규율하는 체계는 우리들이 만든 것이지, 테크놀로지가 그러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가가 거대한 디지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만, 역시 감시체계 자체는 중국국가의 선택인 셈이다.³⁾

이런 관점에서 서서 보면 인간이 테크놀로지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사람

3) 이런 논의가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4차산업혁명이라는 산업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기술에 의해 추동되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사회변화의 핵심추동력으로 보는 테크놀로지 과잉의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이 테크놀로지의 사용의 틀과 내용을 만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참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이다. 이를 디지털 민주주의4.0이라 부를 수 있다. 우리의 과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축복과 위험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규율하느냐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전제로 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공론장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가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적 공론장의 위기와 관련하여 로이터와 옥스포드대학이 주관한 보고서(Journalism, Media, and Technology Trends and Predictions 2018)가 진단한 미디어 공론장과 미디어 산업의 상황을 몇 가지만 보면 아래와 같다.

1. 왜곡정보에 대한 감시와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구체적 규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2. 페이스북과 구글이 방어적으로 콘텐츠들을 삭제할 때마다 검열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 모두 벌금을 무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실확인, 뉴스리터러시, 투명성을 높여려는 시도가 왜곡정보와 낮은 신뢰의 물결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4. 언론사들이 사용자들에게 등록과 서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데이터 축적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콘텐츠와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5. 전통 미디어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디지털 이행을 수행한 유명 언론사(물론 극소수만 성공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언론사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저널리즘의 위기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현재의 미디어 교육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생태계에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익숙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가짜뉴스 전파가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염정운·정세훈, 2019). 온라인 전자서명과 e-커머스의 정보수집, 휴대폰 얼굴인식 카메라와 앱을 통한 사생활 감시와 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일상화되었다. 중국의 경우 이런 감시체계를 오히려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Buckley, 2019; Business Insider, 2018; Urman, 2018).

공론장의 위기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만한 현상은 전체적인 저널리즘 신뢰의 저하 문

제이다. 세계적인 비교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로이터 연구소의 국제비교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미디어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국 36개 국가 가운데 36번째로 가장 낮아서 23%의 수용자들만이 미디어에 신뢰를 보냈고, 27%의 수용자들만이 내가 시청하는 미디어를 신뢰한다고 답했다(김선호·김위근·박아란·양정애, 2018). 이미 80% 정도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착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 신뢰는 하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이 질적으로 수준높은 저널리즘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소셜미디어를 포함해서 대다수 플랫폼들이 클릭에 따른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구독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유료화를 시도했던 기존의 인쇄매체, 방송매체가 대부분 실패하고, 뉴욕타임즈, 뉴욕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디언 정도만이 성공의 사례로 꼽히고 있는 정도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시대에 누구도 그것을 생산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미디어 제작자와 기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다. 시장에서 뉴스 생산 미디어 기업이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저널리즘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⁴⁾ 디지털 민주주의 4.0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디지털 시대 공적 미디어에 대한 지원제도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⁵⁾

유럽 6개국의 공영뉴스기관들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Reuter Institute, 2016)는 영국의 BBC, 핀란드의 Yle 두 공영방송사가 디지털 환경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성공의 근거로 무엇보다 풍부한 자금지원, 디지털문화에 대한 조직의 적극적 수용, 디지털 전환과 파괴에 대한 간부들의 긍정적 수용 등을 꼽았다.

이상의 기존 연구 검토에서 보듯 디지털 파괴의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신문, 방송 전통적 언론사와 디지털 플랫폼 기업, 시민단체, 학계가 저널리즘의 공공서비스 기반에 대한 사회적 포럼을 운영할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4)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저널리즘의 위기에 대해서는 박영흠(2018), 박진우·이정훈(2016), 조희순·이병재·김승연(201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필자는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에도 언론에 대한 공공지원(public subsidy)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이 글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한 민주적 공론장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문제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

3.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전문직의 위기와 역할변화

이번 절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파괴가 미디어 산업 생태계에 가져오는 변화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미치는 미디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양상은 너무나 문제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 글의 관심사인 미디어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미디어 기획과 생산을 담당했던 전문직(프로그램 기획자, 피디, 기자 등)이 당면한 위기와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파괴적 혁신은 신문과 텔레비전에 종사했던 전통적인 미디어 전문직의 고용형태를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는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고 있다. 언론학 교육의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산업과 서비스의 변화에서 미디어 전문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미래일자리 보고서(World Economic Forum, 2016)는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일자리는 200만 개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4차산업 혁명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생겨날 것인가에 대한 진단과 예측은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기에 여기서는 제외한다.

딥러닝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은 의료, 법률, 디지털 휴머니티, 자율주행, 소비자마케팅 등 전체 산업영역의 운영방식과 인간과 기계의 역할을 바꾸어 놓고 있다. 200여년에 걸쳐 형성된 전문직(의사든 변호사이든, 엔지니어이든)들이 담당하던 작업과 노동의 영역에서 인간노동과 기계노동의 새로운 결합과 협력을 통해 생산과정이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미디어 아트,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담당했던 언론학은 이것을 어떻게 연구와 교육의 대상으로 수용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면하게 된 것이다. 딥러닝과 빅데이터와 결합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전반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세 가지 영역을 선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지털 플랫폼의 기획자이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서 의료인공지능, 2) 디지털 휴머니티의 한 분야로서 디지털 출판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획과 구축에서 기획자의 역할, 3) 언론노동의 불안정성(precaarity)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학 교육의 대안 등 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문직 노동과 작업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물론 초점은 이들이 언론학 교육이 담당해야할 인력양성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맞출 것이다.

1) 디지털 플랫폼 설계 영역에서 커뮤니케이터의 등장

의료 인공지능과 환자의 빅데이터가 결합되고 있다. 이미 대형병원에서 암환자의 진료와 처치에 인공지능 의사가 동석하고 있다. IBM이 초대 경영자의 이름을 따 개발한 인공지능 WATSON

(이하 ‘왓슨’)은 2013년 기준 이미 60만5천개의 의료기록과 2만 건이 넘는 트레이닝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었다(Aggarwal & Madhukar, 2016). 현재까지 왓슨은 약 13종류 암의 진단법을 의학 용어들과 함께 데이터 축적의 형태로 학습 중이다. 안면 인식이 가능한 왓슨의 특성상, 수십만명의 환자들에 대한 인식을 반복 학습하여 데이터와 결합한 건강상태 추측, 병명 진단 및 처방까지 내리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험하고 있다.⁶⁾

IBM의 왓슨에 대한 리서치를 담당하는 수석 과학자이자 의사, 엔지니어, 보건정책분석가인 콘(Kohn)은 데이터를 활용한 로봇 닥터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한다. 의사가 인간으로서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나 힘의 권력(환자와 의사의 권력관계를 의미)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기가 불가능하다(Kohn, 2013).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소통능력의 한계, 그리고 수많은 논문을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재정적 제약도 지적한다. 콘의 연구팀은 의사의 장시간 노동, 환자와 의사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환자자료와 기존 치료와 처방과 관련해서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류와 분석 등에 왓슨이 얼마만큼 활용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가상사례가 곧 가능해 질 것이라고 한다.

가상사례 1 환자와의 커뮤니케이터

A씨는 몇 달 째 pharma-botics robot에게 약을 처방받고 있다.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 외에 약사의 권유로 건강 보조식품을 추가 구입할 필요가 없다. 암 진단을 받은 지난주, 왓슨과 의사 판단 간에 80%가 넘는 판단 일치율로 수술 권유서가 나왔고, 다음 주에는 surgical robot 수술이 잡혀 있다. A씨는 교감 능력이 뛰어난 신형 노인 케어 로봇인 companion robot에게 수술 전날까지 고민을 털어놓고 잠이 든다.

실제 암환자의 진료와 치료 결정과정에 왓슨이 참여하는 경우, 의사와 왓슨은 보완적 관계이기도 하고 경합관계이기도 하다. 왓슨은 미국의 최고수준의 암병원 데이터와 매달 쏟아져 나오는 암진단과 치료관련 학술지를 업데이트한다. 왓슨이 배치된 국내 암병원에서 종래 환자면담은

6) 2016년에 도쿄대 의과학 연구소에서는 왓슨로봇이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린 60대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 후 기존에 투여하던 항암제를 변경할 것을 처방해서 치료효과를 크게 높인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이후 한국에서도 각종 대학 병원과 의학연구소에서 암 진단 소프트웨어인 Watson for Oncology, 유전자 분석 소프트웨어 Watson for Genomics 등을 도입해 연구가 중이다. 지난 1월 IBM 왓슨 연구팀은 638명(2014-16년)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WFO(Watson for Oncology)과 암전문의 연구팀의 진단과 치료의 일치율이 93%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내놓은 바 있다.

5분을 넘기기 어려웠는데, 왓슨이 참석한 진단회의(diagnosis conference)는 기본적으로 20분을 할당한다고 한다.⁷⁾ 환자의 입장에서 진단과 치료의 선택폭이 넓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 의료체계에 새로운 일의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환자, 의사, 간호사, 의료인공지능(여기서는 왓슨)의 관계가 상당히 바뀔 수 있게 되었다. 왓슨이 하듯 미국 최고의 암병원들과 유럽과 아시아의 유력 병원들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진단과 처방, 처치 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왓슨이 분석해서 환자와 소통할 경우, 의사와 왓슨의 관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소통전문가의 역할(이걸 의사가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의료전문가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현재의 영상판독이 전문분야로 자리잡았듯이)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공지능의 도입은 언론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 전체에서 볼 때, 의료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은 의료체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일과 노동의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고, 실제 병의 진단과 처치에 적용하는 전문직의 주체도 의사와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빅데이터, 의료정보와 지식 생산 및 분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직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일과 노동의 영역을 담당하는 인력을 어디에서 키우고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언론학 내부에서는 보건의료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이 의료캠페인과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 디지털 휴머니티와 문화큐레이터의 역할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배포, 그리고 이를 즐길 수 있는 독자층의 범위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분야 중 하나가 디지털 휴머니티(digital humanities)라 부르는 영역이다. 디지털 휴머니티는 전통적인 출판 분야 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 분야, 박물관, 미술관, 아카이브, 도서관 등 인류의 문명적 축적을

7) 왓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의 비공식 인터뷰.

8) 이 논의에서 자주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왓슨의 기능적 정체성이다. IBM이 연구하고 선보이는 딥 러닝과 인공지능 플랫폼은 셀 수 없이 많은 전세계 환자들의 개인 정보와 일련의 질병 치료 과정을 트래킹하고 수집 축적하고 있다. 환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의료 기관과 협력한 플랫폼 업체에 알게 모르게 스스로 제공해주는 개인 정보의 양은 하루에도 수 억 건이 넘을 것이다. 왓슨이라는 의료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과 의료빅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까지는 좋는데 이 데이터 베이스의 공격 성격,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의 소유권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부재하다. 이를 디지털 플랫폼의 통치체계(governing regime)라 부를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운영하는가는 여전히 사회의 몫이다.

보관하고 전시하고 보여주는 문화기구와 제도들을 통칭한다. 인문공화국지 도그리기(Mapping the Republic of Letters), 구텐베르크프 로젝트 (Project Gutenberg) 등은 대표적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들이다. 스탠포드 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인문공화국 지도그리기’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미 중세이후 근대와 현대까지 고전 문헌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이후 유럽 여러지역에 남아있던 일기나 메모를 비롯한 생활세계의 기록들을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고, 그것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세계적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구축해 놓은 예술과 문화유산 아카이브 역시 직접 그곳에 방문하지 않아도 수많은 예술작품과 유물 유적에 관한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고, 그것도 많은 경우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상 사례 2.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와 문화유산 큐레이터

모처럼의 휴가에 엄마B 씨는 외출 대신 집에서 휴식을 하기로 했다. B 씨 아들의 정보와 심리상태를 실시간 받아보고 있는 ARCHIVO(가상 AI로봇)는 모자가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한 전 세계 오리지널 뮤지컬 공연 정보와 평소 관심있던 해외 여행지, 책 등을 선별해 보여준다. “이탈리아 : 로마-콜로세움”을 선택한 후 고글을 쓰자, 고대부터 오늘날의 로마까지 파노라마 전망으로 볼 수 있는 AR(Augmented Reality) 영상이 눈 앞에 펼쳐진다. 이후엔 셰익스피어 희극 초연이 이루어졌던 런던 Globe 극장에서의 공연을 예약해 두었다. 전 세계 공연 접속자들이 실시간 울리는 관람후기뿐만 아니라, 연출과 공연진행의 세밀한 사항들까지 디지털 공연책자에 접속해서 관람준비도 끝냈다. 모자는 이렇게 휴일을 맞아 거실 소파에서 서유럽 여행을 다녀온다. 여행이 끝난 후 모자가 남기는 후기는 ARCHIVO 데이터로 남아 B씨의 아들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또래들에게 추천될 것이다.

이 사례에서 모든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는 현재까지는 박물관, 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이 각각의 문화유산에 대해 콘텐츠를 구축해왔다. AR 영상을 통해 콜로세움을 관람하는 수용자들은 콜로세움 건축물뿐만 아니라, 연관된 로마의 역사, 인물들에 대한 자료들도 같이 접근하기를 원할 것이다. 여행을 목적으로 이 아카이브에 접근한 사람들은 여행관련 정보와 여행 후기 등을 동시에 보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 수요, 생활상의 요구에 충족하는 콘텐츠의 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의 정보와 지식을 매개하는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해 질 것이다.

오늘날 기사와 콘텐츠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보의 홍수 속에 맞

춤형 콘텐츠를 수용자가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전달하는 일이다. 콘텐츠의 폭과 깊이, 소화 시간과 타이밍 외에도 한참 세분된 모든 요소를 수용자가 일일이 요구하며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매개의 영역이 만들어내는 일과 노동의 영역을 ‘인문 큐레이터’(humanities curator)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전문영역은 어느 분과학문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된다.⁹⁾ 이 점은 마지막 절 언문학 교육과 관련된 제안에서 다시 논의한다.

3) 콘텐츠 분야와 미디어 - 제작자의 역할

2016년, 구글 답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은 총 5경기 중 알파고의 4승으로 끝났다. 이후 큰 위기를 느낀 바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전통적 포석을 뛰어넘는 바둑전략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영상프로그램 생산 제작과정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청관련 데이터를 축적해왔던 (주로 시청률 조사)회사들이 국내 주요 방송사와 협력해서 시청률 분석틀을 개발하지는 제안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콘텐츠의 기획 제작 과정에 시청 관련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셈이다(이종희, 2019).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능력과 빅데이터를 디자인해서 분석하는 능력, 양자를 결합하는 능력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여러 대중문화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이미 제작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사례로 COLIBRI라는 시 제조 컴퓨터, MuzaCazUza라는 음악 제조 컴퓨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개별 문화 장르에서 작업 중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인간이 집어넣은 기존의 언어적 운율, 시각적 패턴이나 리드미컬한 선율을 바탕으로 스스로 개념적 융합(conceptual blending)처리 과정을 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생산하고 있다(Colton & Wiggins, 2012).

9) 국내에서도 디지털 인문학의 틀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 포스트 인간 시대의 새로운 인간 이해와 철학적 논의도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인문학 내부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방편으로 시작된 점도 없지는 않지만 (송은주, 2019; 신상규, 2019), 디지털 인문학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요구되는 철학적 인식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Floridi (2011)의 정보철학 (philosophy of information), Bayley (2018) 등이 제시하는 포스트휴먼시대 교육의 혁신에 대한 논의도 소개되기 시작했다.

사례 3. 콘텐츠 제작자

방송국에 근무하는 C 씨는 인공지능 협업 담당 팀의 CP(Chief Producer)다. 시청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회로애락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robot-creator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로봇을 통해 프로그램 시청률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과 영상적 요소의 제작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의 초기 단계는 C 씨와 소수의 선임 PD들이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큰 틀이 짜인 이후부터는 robot-creator에게 대본을 맡기는 편이 결과와 시간의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금주 타사 대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robot-creator 담당 에피소드 덕분에 광고 매출이 급상승했다. 시청률 상승에 따른 유인책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C 씨는 고민 중이다.

투자전문가, 의사, 변호사의 전문직 노동이 딥러닝을 지속하는 인공지능에 의해 보완되고 대체되고 있듯이, 전통적인 기자와 피디들의 전문화된 작업과정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디어 산업의 구조변동과 함께, 언론전문직의 작업과정, 노동과정 역시 변화하고 있고, 이것은 언론학 교육에 새로운 과제로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세 분야의 논의를 아래 <Table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Table 1. Platform Economy and Newly Emerging Professions and Work Sectors

	의료플랫폼	디지털휴머니티 플랫폼	금융플랫폼	영상플랫폼
기획				
제작				
마케팅				
사용자/소비자				

<Table 1>에서 보듯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산업은 계속 새로운 직종과 노동의 영역을 만들어 낼 것이다. 유튜브와 같은 영상플랫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금융, 온라인쇼핑 플랫폼, 우버와 함께 곧 다가올 자율주행 플랫폼 등등. 국가기관들이 축적하고 있는 금융과 세금, 건강, 임금, 범죄, 부동산 등 수많은 개인들의 자료가 축적된 공공데이터 플랫폼 역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디지털 기업들은 국가기관이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 거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수익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민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사실상 전국민의 의료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가 이미 수많은 건강과 보건 관련 스타트업에 이름을 전제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의 플랫폼은 경제이기도 하고 정치이기도 하고, 생활세계이기도 하다. 플랫폼 경제, 플랫폼 정치, 플랫폼 생활세계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은 언론학의 연구와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는 대상이 되는 것일까? 디지털 휴머니티에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를 언론학이 교육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먼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여러 플랫폼에서 빅데이터는 언론학 대상이 되고, 의료데이터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장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영역을 포괄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질문은 곧 언론학 교육과 연구의 영역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앞에서 이 글은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라는 핵심적 현상에 한정해서 디지털 영역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다시말해 언론학이 정보와 지식을 제작기획하고, 유통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주요 연구와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일과 노동의 영역, 산업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파괴적 혁신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다음 절에서는 60년을 이어온 언론학 교육의 맥락에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가르침과 배움의 과제를 혁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 60년의 축적 위에서 언론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앞선 논의에서 우리는 언론학 교육이 마주하게 된 디지털 파괴와 산업의 변화, 그리고 공론장의 주요 행위자로서 저널리즘이 정치적 위기, 산업적 위기에 빠져있음을 살펴보았다. 어려운 상황이고 미디어 산업, 대학, 연구자, 언론인들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3대 지상파 방송국이 10년, 2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까를 당사자이든 바깥의 연구자들이든 잘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10년 전에 유튜브,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아무도 몰랐던 것 또한 사실이다. 언론현장이 이러하니 이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언론학 교육의 현장 역시 혼란스럽다. 어떻게 교과과정을 바꿔야 할까, 어떤 능력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10년, 20년 뒤에도 '나'는 미디어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스스로 어떤 역량을 키우고 어떤 스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이들 질문에 누구도 제대로 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언론학 관련 학과의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두 가지나 더 있다. 첫째

는 교육혁신4.0이 테크놀로지를 통한 교육혁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교육혁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모두 다 바뀌라’이다. 바꾸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담론이 어디에서나 넘쳐난다. 디지털 교육혁신4.0을 사고하기 위해 세 가지 문제영역에서 언론학 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적순으로 서열화된 대학위계구조 안에서 언론학 교육혁신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윤리를 교육하는 방안, 셋째, 언론노동의 불안정성 구조에 대응하는 언론학 교육의 혁신방안 등 이렇게 세 분야에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1) 서열화된 대학 위계 구조에서 언론학과는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스카이,’ ‘인서울’ 등 입학시험 점수 중심으로 측정한 성적별 서열구조는 교수 학생 모두를 좌절시키고, 사회적 차별의 준거로 굳어졌다. 대학의 서열구조 비판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수로 서열화된 능력차별이 수많은 학생들을 좌절시키고, 다른 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사장시키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언론학 교육의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한국의 대학입학이 과목 중심 시험성적으로 서열화되었고,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학부 교육혁신의 측면에서 대학의 서열구조는 참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소위 ‘스카이대학’과 수능점수가 낮은 대학의 학부 교과과정은 달라야 할까? 송상근(2018)에 따르면, 신입 기자들이 대학에서, 언론사 입사 전에 배웠거나 예상했던 언론 및 기자의 모습과 자신들의 체험이 매우 다르므로 그 이상과 현실, 원칙과 관행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민한다고 한다. 결국, 사회에 진출하기 전 스스로에 관한 최종 훈련의 장소였던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오히려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심각할 정도로 불일치한다는 결과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동안 언론학 교육의 혁신에 관한 보고서나 연구논문들이 제시했던 답, 혹은 현실은 이론과 실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하느냐의 문제였다. 성적이 높은 대학은 이론 중심 혹은 이론과 실무의 균형, 낮은 대학은 실무 중심 정도였다(하중원, 2018). 대다수 대학이 이론과 실무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기사작성, 프로그램 제작관련 과목을 제공해 왔다. 하중원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매체에 따라 전공교육이 계속 세분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수 신문사 방송국은 언론학 이론을 잘 교육받은 학생을 원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개발한 입사시험을 거쳐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과 현업출신 언론학 교수들이 언론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저널리즘 교육을 저널리즘 교육답게) 주장하였다(이재경, 2005). 미국식 대학원 저널리즘 집중교육(컬럼비아 저널리즘 대학과 유사한 형태)을 도입하자

는 제안도 나왔다(김성해, 2007).

윤석민과 배진아(2018)는 언론학 교육에 대한 국내 논의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뒤 학부 미디어 전공교육의 추세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국내 언론학 교육 교과과정은 이론-실무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절충형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이론-실무교육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교육기반이 취약하고 실무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교과과정의 목표에 따른 엄격한 운영과 교과과정 체계화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와 현황을 소개하면서 융합 교육을 지향하기 위한 실질적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정동훈, 문신일, 그리고 조재희 (2017)는 융복합교육으로 언론학 교육이 전환해야 하는데, 필요한 교수법들을 제대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언론학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더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과제가 되었다. 왜 그러한가? 앞에서 보았듯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융합으로, 특정한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은 빠르게 용도폐기가 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언론학 관련 전공지식보다, 평생학습능력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새삼스럽지 않다. 이런 생산현장의 변화 때문에 기존의 신문사, 방송국은 갓 졸업한 학생들을 신입사원으로 거의 뽑지 않고, 기획, 제작, 마케팅, 소비자 관계 등 어느 영역에나 투입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원하게 되었다.

뉴스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좁은 의미의 저널리즘 영역, 혹은 민주주의 핵심영역으로서 공론장의 영역에 한정해 볼 때도, 정보와 지식의 생산을 담당하는 기자나 스토리텔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들 자신이 어떤 핵심역량을 키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경제, 의료, 과학, 문화 등등 기자 전문화(journalist specialization)가 담으로 나와 있었지만, 디지털 저널리즘, 디지털 공론장의 시대에는 더이상 지식을 갖춘 기자훈련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된 것이다. 기자와 스토리텔러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어떻게 설정하고, 언론학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셈이다.¹⁰⁾

여기에서 이 글은 언론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분과학문의 틀을 벗어나는 분과학문’(discipline beyond discipline)으로서의 언론학. 둘째, 전공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언론학 교육과정의 혁신. 첫번째, 분과학문을 넘어선 분과학

10) 이 지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필요한 지식의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몇 년 뒤에면 용도폐기되는 상황에서 교과과정의 혁신은 어떻게 이동을 할지를 필자 역시 받들이기 어려웠다. 그것은 교수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시대 교육혁신이 더욱 어려운 까닭이 될 것이다.

문으로서 언론학은 초분과학문(trans-discipline)으로서 언론학을 설정하지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언론학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과학문에도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과학문을 넘어서 언론학 교육의 미래를 사고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융합의 모델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 실험도 가능할 것이다. 예술 분야와 융합한 저널리즘 학과, 로봇과 커뮤니케이션학과는 전혀 새로운 상상이 아니고, 이미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융합학과이다. 이미 많은 뉴스룸에서 기자는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 디자인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한다. 혹은 뉴스룸 내부에 기자와 디지털 디자이너가 하나의 팀을 이뤄 작업을 하는 사례는 이미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이게 조금더 나아가면 ‘저널리즘디자인학과’가 된다. ‘미디어아트와 테크놀로지학과’ 역시 너무 나아간 상상이 아니다. MIT 미디어랩이 진행하고 있는 “포옹하기”(The Huggable)라는 사회로봇 (social robot) 프로젝트가 있다. 아동병원에서 어린이환자와 부모들을 돌보는 사회 로봇인데, 핵심목표는 돌봄로봇과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박사논문도 여러 편 나와있다. Media Arts and Science 학과 교수가 이 과제를 주도하고 있다. 사회 로봇 프로젝트가 보여주듯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딥러닝 등 기술과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융합되고 있고, 이러한 융합분야를 어느 학문분야가 먼저 나서서 주도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또 다른 사례로 앞에서 예를 든 ‘인문공화국 지도그리기’ (Mapping the Republic of Letters)는 대표적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과 문화유산,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형태이고, 박물관, 고전과 현대문헌 아카이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분야를 기획하고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영역을 디지털 인문학이라 할 수 있고, 언론학은 이런 분야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어떤 훈련경험을 제공해야하는 것일까?¹¹⁾ 아니면 이런 분야는 언론학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판단할 것인가?

융합을 강조하다 보면, 10년 20년 뒤 언론학 관련 학과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필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과가 학생과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거꾸로 일수는 없음은 자명하다. 50년 뒤 현재 존재하는 학과는 어떻게 변해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분과학문 분야가 사라졌거나, 같은 이름을 유지할지라도 내용은 전혀 다를 것이다.

두번째 제안은 분과학문의 전공지식 교육 보다는 핵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

11) 여전히 이러한 프로젝트는 인문학의 영역이니 언론학의 연구와 교육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카이브는 도서관학, 박물관은 고고학, 스토리텔링은 문학, 이들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작업은 언론학이라는 분과학문 단위의 사고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필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편하기이다. 디지털 시대 언론학 교육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과학문 전공지식에 특화(domain speci)되지 않는 ‘분과보편적 사고’(domain general thinking)를 훈련한다고 하면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인간관계 능력, 지도력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¹²⁾ 개별 능력들 중 어떤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지만, 전공지식과 분과보편적 사고의 훈련을 어떻게 커리큘럼에 도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앞에서 예를 든 돌봄로봇, 인문공화국 지도그리기 프로젝트가 보여주듯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언론학이 개별적으로 모두 수용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게 되면 플랫폼 연관산업이 요구하는 전공지식 전체를 포괄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검토한 사례가 보여주는 교육혁신의 방향은 ‘특정영역을 넘어서는 보편사고’(domain general thinking)를 훈련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말해 디지털 파괴로 생겨나는 융합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를 모두 언론학이 포괄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존 언론학 교육의 핵심 목표를 ‘분과보편적 사고훈련’에 두고, 영역특화된 지식은 보편사고 훈련을 위한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분과보편적 사고훈련은 뒤에서 논의할 실천적 지식의 훈련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한다.

2) 디지털 저널리즘 플랫폼의 사회적 윤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언론학 교육의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두 번째 교육혁신 4.0을 위한 과제는 어떻게 신생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는가, 기술 과잉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교육과정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다. 교육혁신 4.0을 사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특히 이 부분을 별도로 제안하는 까닭은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 시작되고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의 혁신도 기술중심 사고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염두에 두면서 언론학이 인간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철학적, 이론적으로 사고하는 훈련과 경험의 기회를 교육과정에 포함해야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앞에서 왔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딥러닝과 인공지능은 디지털 파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많은 담론이 제기되었고, 앞으로 우리에게 도

12) 고등교육 수준에서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교육학 쪽에서 많은 연구들이 나와있다. ‘영역일반적 사고’와 ‘영역특수적 사고’에 대해서는 노리(Norris, 1992), 방선희(2011), 윤초희(2016)을 참고. 비판적 사고, 창의력에 대해서는 강승희(2011), 황희숙(2001), 무어(Moore, 2004), 노리스를 참고.

전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민주적 사회체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제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한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이다. 언론학 교육의 혁신이라는 우리의 관심에서 볼 때, 그리고 디지털기술을 선도하겠다는 한국산업구조 개혁에서 볼 때, 인공지능의 축복과 위험을 포용하면서 균형감 있는 자기혁신의 길을 구축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딥러닝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기정통부 관료와 연구기관 연구자, 인공지능영역에 투자하는 기업인 등 어떤 한 집단에게만 맡겨두기 어렵다. 그렇다고 현재의 언론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사물과 로봇, 사회운영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socially responsible) 테크놀로지 체계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인공지능이란 윤리적 수준을 넘어 정치적으로 사회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논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자. 캐나다 정부가 주도해서 발표한 2018년 Montreal Declaration for the Responsibl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은 좋은 참고가 된다. 이 선언은 사회 전반이 "신뢰하는 인공지능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1) 중생의 복지를 위해(the well-being for sentient being),¹³⁾ 2) 자신의 삶과 환경에 대한 (선택)자율성의 존중, 3) 프라이버시와 친밀성의 보호, 4) 사람과 세대 간 연대의 지속을 위한 테크놀로지, 5) 인공지능의 기능, 정당성, 접근 가능성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과정에 시민의 민주적 참여, 6)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구축에 기여, 7) 다양성의 원칙, 8)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부정적 사용의 위험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정책의 추진, 9)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사람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책임 준수, 10)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언론학에서 디지털 파괴와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다보아야 하느냐는 맥락에서, 이 선언은 인공지능의 개발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과물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기술체계(regime of digital technology)에 관한 철학과 지식을 생산하고 전수하는 과제가 언론학에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언론학이 인공지능 운영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과제를 자신의 교육과 연구의 영역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기술이 열어주는 플랫폼 체계가 윤리적 도덕적 준거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으

13) 이 선언의 첫 원칙이 인류(human-being)가 아니라 불교적 개념으로서 의식과 감각과 감성을 지닌 모든 중생(sentient being)이란 표현을 쓴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로 책임있고, 인간을 위한 ‘기술체계(technology regime)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인식론이 요구된다. 돌봄 로봇, 섹스 로봇, 노동과정을 총괄하는 노동 로봇은 인간에게 도구와 수단으로 개발되고 또 그렇게 진보하고 있는 것이지만, 감정과 감성조차 획득할 날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기계는 언제나 도구인 것이냐는 질문이 대두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플로리디(Floridi, 2011), 코켈버그(Coeckelbergh, 2013) 등이 기계는 도덕적 존재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포스트 사람 시대 기계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도 신상규(2017), 목광수(2017) 등이 이들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들 연구를 읽어보면 존재론으로서 기계는 도구라는 틀에서 인식되지만, 관계론과 사회적 구성으로서 사회로봇을 인식하게 되면 인간의 타자로서 기계라는 인식이 성립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사회로봇들이 어떤 근거에서 도덕적 책무를 질 수 있는가와 같은 인문학적 철학과 이론을 언론학이 외면하기 보다는 어떻게 수용하고 구성에 참여할 것인가의 질문에 답하는 책무를 떠안게 된 것이다. 저널리즘 교육에서 저널리즘의 언론자유와 책임에 관련된 법제도와 윤리를 가장 중요한 교육영역으로 삼았듯, 이제 디지털 저널리즘 플랫폼이라는 기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기반을 언론학 교과과정에 도입해야 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계로,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타자로 설정하는 사회관계론 등을 발전시킬 수 있고, 사회로봇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인식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철학, 정치학, 과학사회학 등의 분야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협력을 하나의 분과학문에서 모두 수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의 제안에서 언론학을 ‘분과학문을 넘어서는 분과학문’을 설정한 틀과 연관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자면, 초분과 학문적, 융합적 교과과정을 학과 단위를 넘어서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질문이 된다. 다른 분과학문과 협력적 교육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운영의 단위를 학과(department)에서 프로그램(program) 단위로 제도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과학문이 모여있는 단과대학이 아니라, 유연성을 지닌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된 교육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저널리즘을 작동시키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책무,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저널리즘 플랫폼을 위한 사회적 책무 모듈’(social responsibility module for digital journalism platform)이라는 식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학에서만 담당하지 말고, 법학, 철학, 정치학과 사회학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안 역시 전연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¹⁴⁾ 이걸 조금더 유연

하게 분과학문에 기반한 전공이라는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경계를 허물고 유연성을 전제로한 모듈기반의 교육과정을 설정해보자는 것이다.¹⁵⁾

3) 디지털 노동의 불안정성(precarity)과 교육의 혁신:

실습에서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으로

디지털 파괴와 관련하여 언론학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생산과정이 불안정 노동(precarious labor)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지상파 방송국, 주요 신문사에서 피디와 기자로서 평생 일할 수 있는 고용형태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기사는 전문직으로서 중산층 화이트칼라 노동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의 경우에는 같은 세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원하는 직장이었다. 최고의 직장으로서 신문기자, 방송기자와 피디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운영하는 수많은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채널이 가짜 뉴스, 음모론, 선정적 뉴스를 생산하면서 저널리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디지털 파괴가 가져오고 있는 이런 저널리즘 생산의 변화에 대해 창조적 개인이 자유롭게 표출하는 정보와 지식이 공론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디지털 엘리트 이외의 대다수 노동자가 불안정하고, 비정규직으로 작업하고 노동하는 조건이 일상화되고 있다.

언론학과와 미디어학과가 더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한 분과학문이 아니게 된 셈이다. 노동의 불안정성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언론학에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직업시장의 변화에 당면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는 당연히 우리의 책무에 속한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디지털 거대기업 뿐만 아니라, 이들의 우산 아래에서 혹은 우산 바깥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의 인재들이 꿈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제 미디어 관련 학과는 예술분야와 유사한 분야가 되어 가고 있다. 졸업생이 취업한 비율이 지극히 낮고, 자기 고용이 일반화되는 노동시장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 노동시장이 일반화된 저널리즘 노동, 프로그램 제작노동,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agile production’ 등은 언론학 교육 앞에 주어진 당면과제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프로젝트 기반 노동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고,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

14) 하종원(2017) 교수가 모아놓은 전국대학 신문방송, 언론학 교과과정이 방대하고 최근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15) 이 지점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한 저널리즘과 민주적 공론장의 위기의 문제를 언론학 교육의 혁신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더뤄야 하는데, 그것만을 별도로 떼어 내어 다루기 어려워 여기서 제외하고, 다음 절에서 저널리스트 노동의 문제만을 검토했다. 물론 지면의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다.

지에 대해 현장에 기반을 뒤서 관찰하고 연구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임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프로젝트 기반한 노동과정이 제도화되어 있고, 정규직이란 소수에 불과하다. 게임산업의 불안정 노동과정을 연구한 이상규(2018)의 관찰에 따르면, 오히려 프로그램 디자이너들 스스로 정규직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¹⁶⁾

영상 플랫폼, 저널리즘 플랫폼, 문화유산 플랫폼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작업영역에서 일할 전문직을 저널리스트, 피디, 큐레이터, 기획자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소수의 정규직을 제외하고 프로젝트 노동이라는 불안정한 계약노동으로 편입되고 있다. 신문사, 방송국에 입사시험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고, 언론학 관련학과 졸업생들은 마치 예술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유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편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교육 4.0의 틀에서 그리고 언론학 교육의 관점에서 두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훈련과정의 제도화. 둘째, 전공, 교양, 실습의 비중(혹은 비율적 균형)을 혁신하는 커리큘럼 설정. 이렇게 두 가지이다.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산업이 요구하는 작업자들의 역량은 지식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 뿐만 아니라, 협업능력, 일을 주도하는 능력 등, 사실상 만능의 역량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디지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산업의 생산과 제작형태가 앞서 보았듯 프로젝트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 이런 생산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언론학은(사실상 대부분의 학과와 단과대학 그리고 나아가 전체 대학이 그렇게 되고 있지만) 프로젝트 기획부터, 작업과정 조정(이를 최근에는 agile and scrum production이라 부른다), 포스트프로덕션 관리와 운영 등의 훈련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 훈련경험은 전연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기사작성, 프로그램 제작 과목이 조금 더 확대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이런 기획과 작업수행, 후속 작업 등의 과정에 필요한 협동능력, 감정조절과 돌봄감성, 집중력 등은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최근 미국의 대안대학, 실험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Minerva College)의 사례가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이 실험대학은 전공과 교양 등 지식중심 강의는

16) 이 맥락에서 불안정노동이 전면화되고 있는 노동관계의 추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노동하는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상규의 참여관찰이 최근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과정이 소수의 창의력을 갖춘 엘리트가 많은 성과를 가져가고, 대다수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에 처하는 현실적 변화를 비판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또 그런 산업과 노동의 변화에 적응할 핵심역량을 키워줄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 셈이다.

17) 언론학 교육에서는 앞서도 논의했듯 실무과목과 인턴십이라는 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 왔다. 해당분야에(방송국 피디, 종이신문 기자, 카메라, 광고제작 등등) 취업을 전제로 실습과 인턴을 운영해왔다.

전면 폐지하고(어떤 강의에서도 교수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습득은 온라인을 통해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시험까지 치루는 방식으로 바꿨다.¹⁸⁾ 학교 교과과정과 수업에서는 전공에 관계없이 (이 학교는 사실상 개별전공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섯 개의 통합전공을 제공한다) 핵심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실험대학의 교육과정을 설계한 코슬린(Kosslyn, 2017) 학장은 21세기 대학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알려져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은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수많은 능력의 다양한 결합인 이런 핵심역량을 실제 훈련하기 위해서 코슬린과 기획팀은 100개에 달하는 생각의 습관(habits of mind)과 기본개념(foundational concepts) 목록을 만들었다. 4년간 미네르바 학생들은 HCs라 불리는 100개의 사고훈련의 목록을 실제 수업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받는다. 예를 들어 100개의 목록 가운데 “자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의 유형과 범주를 구분하라,”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전략을 구상하라”와 같은 ‘생각의 습관’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100개의 목록은 어느 수업에서나 학생들이 자신의 토론, 제안서, 모델구성에 사용하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라는 사회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해결책에 이들 목록에서 상당수를 적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도시빈곤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이들 생각의 습관과 기본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을 이들은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의 적용이라고 부른다. 미네르바 대학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실천적 지식을 실제 현실과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실천적 지식을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훈련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에 근거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작업과 노동,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교육의 틀로서 전공특화적 지식은 교육을 위한 재료로 삼고, 분야보편적 사고를 적용하는 실천적 지식의 적용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자는 것이다.

18) 이를 미네르바 대학은 ‘flipped learning’의 전면 도입이라고 했다. 이것을 흔히 ‘거꾸로 학습’이라고 번역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순서를 바꾸고 지식전달과 습득은 온라인에서 그러한 지식과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고 토론하는 배움의 과정은 수업시간에 하는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flipped learning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통합학습’이라 번역하는게 타당할 듯하다. 미네르바 대학은 온라인 강좌, 예를 들어 지구역사(global history) 혹은 알고리즘의 기본 등과 같은 과목은 지식 전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들 과목은 한 사람의 교수가 온라인을 통해 가르친다. 이 때 학생들이 어디에서 접속하든 개의치 않지만, 실시간으로 모든 발언과 참여행동을 모니터링한다 (심지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눈동자까지 모니터링한다고 한다). 동시에 실시간 교수의 질문과 응답, 시험도 진행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강좌이다. 실제 물리적으로 교수와 학생이 만나는 수업시간은 공부한 결과를 적용해서 토론하도록 되어있다. 수업은 관여수업(active learning)이라 불리우고, 교수의 역할은 강의가 아니라는 모든 학생들이 토론과 발표, 비판과 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데 맞춰져 있다. 동시에 교수는 학생의 참여도, 관여도를 실시간으로 점수화해서 기록한다(1점부터 4점까지 색깔로 표시된다). 더구나 대부분의 교과목은 여러 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강의성과에 대한 평가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의 방안으로 전공 지식, 교양지식, 실무훈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식전수는 줄이고 실무훈련은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직업중심 대학(occupational college)에서 활용되었던 ‘작업에 기반한 교육훈련’ (work-based learning)을 4년제 대학 언론학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경우 작업에 기반한 교육훈련의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작업훈련 2,000시간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Giffin, Neloms, Mitchell, & Blumenthal, 2018). 2,000시간은 주당 40시간씩 50주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의 입장에서 1년을 전일제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다. 시멘스(Siemens)의 경우 독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일반대학, 복수대학(dual university,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결합), 응용대학, 직업대학 등 4가지 대학의 졸업생들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⁹⁾ 한국의 경우에도 대학의 형편과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조정하면서 작업에 기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과의 모든 학생에게 이것을 필수로 하기 보다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현장에서 훈련은 인턴십을 하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이 제도를 꺼려하고 허드렛일이나 심부름이나 시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해왔다. 이것을 정식 학과의 트랙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전국적으로 설치된 창업, 창의관련 센터나 공간과 제도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제도화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협력과정을 수행하고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산학협력 교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에 특화된 교수가 이런 업무를 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교수층원의 방식도 이런 점에서 대학의 사정에 따라 크게 바뀌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²⁰⁾ 교육부의 논문중심 교수평가제도가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하기도 하다.

이와 함께, 미네르바가 하듯 사회현장에 대면해서,²¹⁾ 실천지식을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하

19) 시멘스는 미국에서만 9개주에서 대학들과 협력해서 도제(apprenticeship)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 우리가 알고 있듯 미국의 저널리즘 대학에서 실습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현업출신으로, 저널리즘 현장, 미디어 제작현장에 필요한 교육만 담당해왔고, 대우나 평가 모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 교수라는 직업 형태가 이미 한국대학에도 도입되었지만, 어떻게 이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실천모델(best practices)이 정착되지 못했다.

21) 미네르바의 경우 세계 6개 도시에 4개월씩 학생들이 거주하면서 현장에서 자신들이 사회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는 훈련을 하는 형태의 이론과 실습을 겸한 훈련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러가 되는 실습과정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미네르바가 제안하고 있는 생각의 습관과 기본개념으로 구성된 실천적 지식을 적용하는 일련의 훈련과정을 커리큘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력차별, 정당정치외의 위기, 홈리스 등등 사회문제를 다큐나 스토리로 제작할 때, 자신이 인용하는 근거자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분석능력과 대안적 자료를 비교 평가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공지식(언론학이든 인접학문이든)과 교양지식을 수강하는 학점의 수는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위에서 논의한 언론학 교육의 혁신 방안으로 작업에 기반한 교육훈련과 실천적 지식의 적용 훈련이라는 두 가지 대안은 한국 대학 현장에서 다시금 형식과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거부와 비판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거론하고자 한다. 두 가지 제안이 모두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는 것이니까, 대학교육을 시장의 요구에 종속시키고 인문학적 소양을 간과한 대안이라는 비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대학이 비판적 지식의 생산과 실천을 담당하는 거점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을 이 글이 논하지 않은 것은, 교육의 문제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실천적 지식의 생산과 훈련은 산업과 시장을 추수하지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주장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제시한 실천적 지혜(phronesis; practical wisdom)가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Hughes, 2001). 고대 그리스 철학을 텍스트로 읽느냐, 아니면 작업의 현장에서 실천적 경험을 통해 몸과 머리로 습득하는나의 차이만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에 대해 예상되는 비판 혹은 장애물 중 두 번째는 특히 수능 성적으로 서열화된 대학위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소위 '스카이'는 이론 중심, 다른 주변부 대학은 실습중심이라는 이분법이 큰 장애물이다. 위의 논의에서 보았듯 이론은 실제 현실과 현장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전달된 전공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산업이 요구하는 소통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은 오히려 입학성적 중심의 서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학력고사 성적으로 서열화된 위계구조에 근거해서 학생능력을 평가하는 기존의 편견(특히 이 편견은 사회 전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수들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이 틀렸음을 보여줄 여지가 훨씬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 노동시장이 전면화되는 플랫폼 경제에서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동능력, 열정과 감성은 학력고사 성적과 상관관계가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²²⁾ 역설적이지

22)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여러 당사자(교수와 학생)들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기존의 대학서열구조에 대한 편견

만,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젝트 기반 노동구조는 오히려 학력서열 구조를 깰 수 있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기도 한 것이다.

4. 맺는말

이 글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파괴적 혁신에 당면해서 언론학이 어떤 위기에 당면해 있고, 그런 위기의 맥락에서 언론학 교육을 혁신하는 틀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답해보고자 했다. 산업 전반이 디지털화하고 있고, 여기에 기반해서 플랫폼 경제와 산업이 핵심 변화를 이끌고 있었다. 신문과 방송매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포섭되는 추세 안에서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은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도 보였다. 이들 분야에 인적 자원을 제공해 왔던 언론학 분야도 동시에 위기에 빠진 것이다. 전통적 미디어의 틀에서 보면 위기이지만, 영상 이든 저널리즘이든 혹은 인문예술 콘텐츠이든 디지털 플랫폼의 생성에 언론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확장으로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언론학 자체의 정체성 기반이 무너질 위험도 당연히 있었다.

〈Table 1〉이 보여주듯 디지털 플랫폼의 생성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작업과 노동의 영역, 전문직의 영역에 언론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언론학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도 가능하지만, 필자는 새롭게 열리는 전문직 작업의 영역에 언론학을 훈련받은 학생들의 진출영역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입장을 취했다. 심지어 의료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생겨나는 ‘의료 큐레이터,’ 문화유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문화유산 큐레이터’의 영역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이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넘어 새로운 직종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레이터가 방송국의 피디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런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추세를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절에서 이 글은 미래 언론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열화된 대학위계 구조에서 언론학과는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이론과 실무라는 이분법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가 아니라, 분과학문의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분과학문을 넘어선 분과학문’으로 언

(이것은 지역대학의 학생들조차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열정과 자기확신의 기반을 빼앗고 있다는 현실이 더 커다란 문제였다.

론학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언론학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전공지식 특화적 교육보다는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방향전환을 제안하고자 했다.

둘째,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 언론학 교육의 혁신의 논의가 기술중심적으로 기울 수 있을 것을 경계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교육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포스트 휴먼 시대에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인식론의 재설정이 요구됨을 설명하고, 디지털 인문학과 협력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론을 설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언론학 교육의 입장에서 이들 다양한 분과학문과 협력을 위해 연계전공, 협동과정, 융합전공과 같은 시도를 받아들여, 프로그램 단위의 주제별 모듈이라는 교육틀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과학문 별로 독립된 학과중심제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지식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듈에 근거한 교육단위의 유연성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디지털 파괴는 미디어 노동과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통적으로 예술 분야와 같이 비정규 노동, 프로젝트 노동을 전면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과정의 전개 앞에서 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능력을 훈련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디자인과 서비스와 마케팅 그리고 포스트프로덕션 작업 등을 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과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미네르바 대학의 사례를 들어 주장하고자 했다.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의 핵심역량 뿐만 아니라, 협동능력, 감정조절과 돌봄감성, 집중력 등은 교과과정 바깥에서 교육될 수 있다는 최근의 추세를 받아들여 '작업에 기반한 교육'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실습, 인턴십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현장교육을 강화해서 실천적 지식의 훈련을 통해 이러한 핵심역량이 훈련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했다.

언론학 교육 60년의 역사 안에서 민주적 공론장을 구성하고 이론과 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언론학은 디지털 혁신의 파도를 맞으면서 위기에 놓인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변신을 통해 새로운 융합적 분과학문으로 거듭날 기회를 맞고 있다. 결국 기회는 언론학 교육을 담당한 교수들과 제도 운용을 책임진 대학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파괴는 긍정적 혁신으로 거듭나게 되리라 믿는다.

References

- Abrassart, C., et al. (2018, 12, 5). The Montreal declaration for responsibl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ethical development of AI are unveiled. Université de Montréal & Fonds de recherche du Québec.
- Aggarwal, M., & Madhukar, M. (2016). “Watson Analytics for Health Care: A Miracle Made True”, *Advances in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and Administration* (pp. 117-134).
<http://dx.doi.org/10.4018/978-1-5225-1002-4.ch007>
- Barber, B. R. (1998).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Technology and Strong Democra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3(4), 573-589.
-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ayley, A. (2018). *Posthuman pedagogies in practice*. London: Pargrave.
- Coeckelbergh, M. (2013). *Human being@Risk*. Dordrecht-New York: Springer.
- Colton, S., & Wiggins, G.A. (2012). Computational Creativity: The Final Frontier?
http://ccg.doc.gold.ac.uk/wp-content/uploads/2016/10/colton_eca12.pdf
- Floridi L. (2011). *Philosophy of Informa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Hearn, G. (2014). Creative Occupations as Knowledge practices: Innovation and precarity in the creative economy. *Journal of Cultural Science*. 7(1), 83-97.
- Hughes, G. H. (2001). *Aristotle on Ethics*. London: Routledge.
- Giffin, J., Neloms, J., Mitchell, A., & Blumenthal, D. (2018) (eds.), *Work-Based Learning Definitions. Themes From States and National Organizations*.
URL: https://ccrcenter.org/sites/default/files/WorkBasedLearning_StateDefinitions.pdf
- Kohn, M. (2013, 11, 6). IBM Watson: Will Your Doctor be a Robot? Interview conducted on campus of Singularity University. URL: <https://www.youtube.com/watch?v=M8PdLiwc0J8>
- Moore, T. (2013). Critical thinking: Seven definitions in search of a concept.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8(4), 506-522.
- Nerone, J. C. (2012). The historical roots of normative model of journalism. *Journalism*, 14(4), 446-458.
- Newman, N. (2018). *Journalism, Media and Technology Trends and Predictions*.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University of Oxford.

Norris, S. P. (1992). Introduction: The generalizability question. In S. Norris (Ed.), *The generalizability of critical thinking: Multiple perspectives on an educational ideal* (pp. 1-8).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Peschl, M., & Fundneider, T. (2012). Spaces enabling game-changing and sustaining innovations: why space matters for knowledge creation and innovation, *Journal of Organisational Transformation & Social Change*, 9(1), 41-61.

Schudson, M. (2008). *Why democracies need unlovable press*. Cambridge, UK: Polity Press.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pdf.

최초 투고일 2019년 8월 9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8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10일

부록

- 강승희 (2013). 한국대학생을 위한 비판적 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동북아문화연구>, 34권, 169-190.
- 김선호·김위근·박아란·양정애 (2018).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한국>.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성혜 (2007). 미디어와 교육. 언론인 전문화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저널리즘 대학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권 1호, 7-42.
- 김영주·정재민·강석 (2014). <소셜뉴스중계자: 뉴스미디어 기업의 대응과 전략>.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영희 (2012). 우리나라 초기 언론학교육의 출현과 그 성격.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132-155.
- 박영흠 (2018). 한국 디지털저널리즘의 사회적 형성 : 디지털뉴스의 상품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 <언론과 사회>, 26권 1호, 135-181.
- 박진우·이정훈 (2016). 민주화 시대의 언론과 '민주주의적 가치'의 후퇴 : 언론인 의식 조사 자료에 대한 검토, 1989~2013. <한국방송학보>, 30권 5호, 43-80.
- 방선희 (2011). 비판적 사고 교육의 국내연구동향과 시사점. <평생학습사회>, 7권 1호, 61-83.
- 손현주 (2019).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미래. <사회사상과 문화>, 22권 2호, 305-349.
- 송상근 (2018). 수습기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탐구. <한국소통학보>, 17권 4호, 7-40.
- 송은주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교육 - 정보철학과 정보윤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8권 2호, 69-91.
- 신상규 (2019).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와 관계론적 접근. <철학연구>, 149권, 243-273.
- 염정윤·정세훈 (2019).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격, 뉴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이용동기. <한국언론학보>, 63권 1호, 7-45.
- 윤석민·배진아 (2018). 디지털 시대, 학부 미디어 전공교육의 개선 방향. <방송통신연구>, 90-119.
- 윤초희 (2016). 국내의 비판적 사고교육 효과연구 고찰 : 쟁점과 향후 연구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7권 4호, 1-35.
- 이민하 (2019). 문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기반 미술 플랫폼.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0권 3호, 673-682.
- 이상규 (2018). 디지털 창의 노동자는 어떻게 불안정성에 대응하는가?: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희 (2019, 07, 29). "콘텐츠 프로토콜, MBC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강화". <뉴스스>. Retrieved

- fr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9_0000725601&cID=13001&pID=13000
- 이재경 (2005). 한국의 저널리즘 교육.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5-29.
- 이재경 (2013). <한국형 저널리즘 모델: 한국 저널리즘 선진화를 위한 성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동훈·문신일·조재희 (2016). 커뮤니케이션학에 있어서의 융복합교육의 명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권 4호, 39-75.
- 정은령 (2018). 한국 팩트저널리즘의 특징. <언론정보연구>, 55권 4호, 5-53.
- 정진석 (1995).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연구>.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언론학논선 9.
- 조화순·이병재·김승연 (2018). 인터넷 뉴스 댓글을 통한 정치커뮤니케이션. <한국정치학회보>, 52권 5호, 115-139.
- 하종원 (2017).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 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권 2호, 99-122.
- 황희숙 (2001).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교과 통합적 사고력 훈련효과. <교육학연구>, 39권 3호, 187-214.

언론학 교육 60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파괴적 혁신에 당면해서 언론학이 처한 위기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그런 위기의 맥락에서 언론학 교육을 혁신하는 틀을 만들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미래 언론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 세 가지 제언했다. 첫째, 서열화된 대학위계구조에서 언론학과는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이론과 실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분과학문을 넘어서는 분과학문' (a discipline beyond discipline)으로 언론학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둘째, 포스트휴먼 시대에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인식론의 재설정이 요구됨을 설명하고, 언론학 교육의 입장에서 다양한 분과학문과 협력을 위해 프로그램 단위의 주제별 모듈이라는 교육틀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저널리즘 노동의 불안정성(precaarity)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에 기반한 교육'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핵심어: 디지털 혁신, 언론학 교육, 실천적 지식, 디지털 미디어, 기자교육